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5 FEBRUARY 2024 **2**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5 February 2024

발행일 : 2024년 2월 29일

인쇄일 : 2024년 2월 29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곽성웅, 계용택,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백영준,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269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1092699)

목 차

<p>▶ 'Arctic LNG-2' 제재와 러시아 '북극 LNG-2'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p>	-----	2
		박찬현
<p>▶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의 외교정책과 북극 밸런스</p>	-----	13
		이주연
<p>▶ 북방의 소수민족 아이누</p>	-----	20
		장하영
<p>▶ 툰드라의 교육</p>	-----	27
		김자영
<p>▶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ПЫТ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В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ВЫЗОВЫ, ДОСТИЖЕНИЯ, ПЕРСПЕКТИВЫ</p>	-----	38

Кашина Е.В. / Бурменко Р.Р. / Бурменко Т.А.

‘Arctic LNG-2’ 제재와 러시아 ‘북극 LNG-2’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박찬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I. 들어가며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 에너지 믹스(Energy Mix)의 변화를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지형도 바뀌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시장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 중동 등 제3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오랜 기간 러시아는 유럽의 핵심 천연가스 공급자로서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속해왔다. 러시아는 다양한 루트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해오면서 가스 공급의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동시에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첫 번째 북극 LNG 사업인 ‘야말(Yamal)’을 성공시키면서 유럽으로 LNG 형태의 천연가스도 수출해오고 있다. 야말 LNG의 성공적 추진은 북극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신호탄으로 향후 러시아가 글로벌 LNG 시장의 점유율과 지배력을 크게 높인다는 전략적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하였다. 북극 LNG 혁명으로 지칭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한 러시아는 이후 북극 천연가스 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Arctic(북극) LNG-2’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항해 러시아는 최대 시장인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응해 서방은 전쟁 초기 유럽의 높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고려해 제재목록에 올리지 않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PNG)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천연가스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은 그동안 직접 제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러시아의 LNG 생산과 수출 시설인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러시아의 북극 LNG-2 사업은 북극의 대규모 LNG 개발을 통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글은 러시아 북극 LNG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 LNG-2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의도를 살펴보고 해당 제재들이 러시아의 북극 LNG-2 가치사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서방 제재 속에서 북극 LNG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과 향후 북극 LNG 개발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극 LNG-2’ 제재와 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북극 LNG-2 사업에 대한 일련의 제재들을 부과했다. 2022년 4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최초의 직접 제재 조치인 5차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키며 러시아의 LNG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상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이듬해인 2023년 9월, 미국은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그 사업 주체인 노바텍(Novatek)과 관련한 주요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 이를 위한 자재 및 첨단 기술 조달에 참여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제재로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역량 확대를 제한해 미래 에너지 수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해당 제재로 인해 북극 LNG-2의 환적터미널 역할을 위해 설계된 2척의 FSU(부유식 저장·환적 설비)를 운영할 예정인 ‘Arctic Transshipment’ LLC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노바텍의 주요 파트너로서 장비와 기술 및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JSC Energy, Nova Energy 등),와 Green Energy Solution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다.

뒤이어 2023년 11월, 미국은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 운영사인 ‘Arctic LNG-2’ LLC를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2차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미국의 러시아 LNG 공급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제재로서 제재 대상인 ‘Arctic LNG-2’ LLC와의 거래 종료 기한을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극 LNG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거래 종료 기한까지 투자를 마무리해야 하며 제재로 인해 가스 대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럽연합과 미국의 러시아 북극 LNG-2에 대한 일련의 제재 부과에는 각자 나름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들의 북극 LNG-2 제재가 가지는 최우선적 의도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서 전쟁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고자 함

이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된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들과 같은 맥락으로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북극 LNG-2 제재의 또 다른 목적으로 러시아의 북극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가동을 막고 글로벌 LNG 공급망을 재편해 LNG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미국에게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갖춘 러시아 북극 지역의 천연연가스가 미국 셰일가스에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점과 만일 러시아의 북극 LNG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될 경우 유럽 가스시장 내 러시아의 지배적 역할은 더욱 공고화되어 미국 LNG 수출에 치명적인 부담과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금번 제재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과 수출 능력을 제한하고 유럽 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지배적인 역할을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제프리 파이아트(Geoffrey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담당 차관보의 발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러시아가 석유·가스 자원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재를 이용하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다.”라면서도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으로 미국의 LNG 생산능력은 2025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 파트너들과도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LNG 분야에서 유럽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겠다.”라며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¹⁾ 또 그는 미국의 북극 LNG-2 제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노바텍의 주력 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2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바텍이 러시아를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발전시키려는 열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그 프로젝트를 죽이는 것입니다.”라며 제재의 목적을 솔직하고 분명히 밝혔다.²⁾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자연스레 글로벌 LNG 시장에서 최대 수혜자로 자리하였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공급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해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러시아산 LNG를 추가로 수입해오자 미국은 그동안의 태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북극 LNG-2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 LNG의 수출길을 차단하고자 했다. 동시에 유럽으로의 LNG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급감한 러시아의 공백을 대부분 메웠다. 이 결과로 이제 미국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LNG 공급국이 되었고 유럽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LNG 수출시장이 되었다.

1) U.S. Department of State, “Assistant Secretary Geoffrey Pyatt’s Remarks at the 8th HAAE Energy Transition Symposium: The Complex Geopolitical Reality & the Energy Transition” 2023.09.27.

2) High North News, “New US Sanctions Target Russia’s Arctic LNG-2 Our Objective is to Kill that Project” 2023.11.13.

Ⅲ. 제재의 러시아 북극 LNG-2 가치사슬에의 영향

글로벌 LNG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 속에서 러시아 북극 LNG-2에 대한 일련의 제재들은 북극 LNG-2 프로젝트의 추진과 북극 LNG 가치사슬(Value Chain)³⁾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 가동을 막고,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같이 현재까지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계획들은 각 단계마다 일정한 타격을 입었고 동시에 북극 LNG 혁명이라는 야망 달성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① 북극 LNG-2의 파이낸싱

북극 LNG-2는 전체 프로젝트의 보유 지분에 따라 생산된 가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바텍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노바텍이 전체 지분의 60%를 갖고 나머지 지분 40%를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TotalEnergies)와 중국의 CNPC와 CNOOC, 일본의 Japan Arctic LNG 컨소시엄(미쓰이 물산(Mitsui) & JOGMEC) 등 4곳이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북극 LNG-2 프로젝트는 해당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약 2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에너지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제재로 인해 외부 금융 기관의 프로젝트 자금조달이 금지되었고 프랑스와 일본의 신규투자 동결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북극 LNG-2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자 노바텍을 제외한 4개 투자사가 사업의 자금 조달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파기 의사를 밝혔으며 노바텍 역시 장기구매 계약을 맺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사를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거래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로 인해 노바텍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러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자금 조달 역시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만만치 않아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우려해야 하는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② 북극 LNG-2의 플랜트 건설과 생산

북극 LNG-2는 러시아 북극 우트렌네예(Utrenney)의 육상 석유 및 가스유전을 기반으로 660만 톤의 트레인 3개를 설치하여 연간 1,98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극 LNG-2 사업은 야말 LNG와 같이 육상에 플랜트를 건설하지 않고 오비(Ob)만에 위치한 GBS(중력 기반 구조물, Gravity Based Structure)위에 모듈식으로 LNG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이 GBS 플랜트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LNG 플랜트를 설치한 구조물로 무르만스크 인근 벨로카멘

3) LNG 가치사슬은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가공 및 운송 과정을 거쳐 판매 또는 최종 소비까지의 일련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일컬으며 여기서는 북극 LNG 사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의미한다.

카(Belokamenka)에서 조립되고, 기단반도로 수송된 후 육상 인프라들과 연결되게 된다.

당초 북극 LNG-2의 트레인은 프랑스의 테크닙(Technip), 독일의 린데(Linde), 이탈리아의 사이팸(Saipem), 미국의 베이커 휴즈(Baker Hughes)등 서방의 기술로 건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유럽연합의 제 5차 제재 조치가 발효되어 이들 업체들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거나 노바텍과의 협력을 중단하며 건설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이들 업체들의 빈자리는 러시아의 JSC Energy와 Nova Energy, UAE의 Green Energy Solution 등이 대체해가고 있으며 GBS 모듈 역시 프랑스의 가스트랑 스포르 에 떼끄니가스(GTT)를 대신해 중국업체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가스터빈의 경우, 미국의 베이커 휴즈에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약했던 75W급 20기 중 4개만 공급한 후 사업에서 철수하여 노바텍은 터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중국으로부터 가스터빈을 조달받기로 하였다. 이에 현재 트레인 건설에는 중국의 생산업체인 광한연기(Harbin Guanghan Gas Turbine Company)의 가스터빈들이 조달되고 있다.⁴⁾

앞서 러시아 노바텍은 야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LNG 생산과 운영에서 서방의 장비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북극 LNG-2를 추진함에 있어서 LNG 관련 장비와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였고 자국산 대체 비중 확대를 전략적 목표로 삼아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럼에도 제재로 인해 가스터빈 등 플랜트의 핵심 부품 조달에 큰 차질을 겪게 되며 다시 한 번 LNG 프로젝트의 현지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동시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서방의 장비와 기술이 아닌 대체 편에 대한 적합성, 장기간 작동에 대한 안정성 검증의 문제 등에 따라 애당초 설정된 생산계획이나 생산능력 달성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며 같은 맥락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북극 LNG-2의 운송

러시아는 북극 LNG-2에서 생산된 가스를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태지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바텍은 북극항로의 유럽과 아시아로의 중간 기착지인 무르만스크와 캄차카에 두 개의 LNG 환적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LNG 환적터미널은 FSU(Floating Storage Unit, 부유식 저장·환적 설비)로 불리는데 기존 LNG 운반선에 저장 및 육상공급을 위한 장치를 얹어 제작한 것으로서 해상에서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뒤 다시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한다. 즉 북극 LNG-2에서 생산된 가스를 최종 수요처까지 공급하기 위해 쇠빙 LNG선으로 빙하지대 밖으로 옮긴 후 FSU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일반 LNG 선으로 환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FSU는 북극 LNG-2 운영의 핵심으로 천연가스의 재액화 시스템을 통해 LNG 운반의 운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물류의 최적화를 통해 천연가스 공급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케 한다.

4) 러시아 신문 Kommersant에 따르면 Harbin Guanghan Gas Turbine Company에 의해 조달되는 GT-25000 터빈은 198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터빈으로 중국이 이를 국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FSU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후 인도되었다. 현재 사암(Saam) FSU는 북극 콜라(Kola)반도의 우라 구바(Ura Guba)만에, 코랴크(Koryak) FSU는 캄차카의 베크 빈스카야(Bechevinskaya)만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LNG-2에 대한 1차 제제에서 이들 FSU를 지정함에 따라 이들과의 거래 및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현재 사용치 못하는 실정이다. 제제는 미국에 있는 이들 법인의 재산을 제재하고 미국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쇠빙 LNG선을 사용하면 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외국 LNG선들은 제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러시아의 FSU를 활용한 선적 옵션을 가능한 배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북극 LNG-2의 운송 효율성이 상당 부분 제약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러시아가 당장 북극 LNG-2에서 생산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STS(Ship To Ship, 선박 간 운송)방식에 의존하거나 쇠빙 LNG선을 통해서 최종 수요처까지 직접 운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LNG를 운반하는 선박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극 LNG-2 프로젝트 성공에서 LNG 운반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러시아는 더 많은 수의 Arc-7급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극 LNG-2를 포함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제는 러시아의 추가 LNG 운반선 건조를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애당초 러시아 노바텍은 2미터 두께의 얼음을 절단할 수 있는 15대의 Arc-7 등급의 유조선에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이었으며 동시에 북극 LNG-2에 투입될 계획으로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와 일본 미쓰이 O.S.K. 라인스(Mitsui O.S.K. Lines)이 각각 동시에 발주한 3척의 유조선이 한국의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에서 추가로 건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제재라는 장애물을 마주하며 상당 부분 계약이 해지되거나 건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상당한 양의 계약을 수주했던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러시아 소브콤플로트로부터 수주한 3척의 쇠빙 LNG선 계약을 점진적으로 모두 해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 소브콤플로트에 대한 제재와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퇴출에 따른 러시아 측의 중도금 미납이 문제가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 해지된 3척의 LNG 운반선을 자체비용으로 계속 건조하고 향후 새로운 선주사를 찾아 판매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발주한 3척에 대한 주문은 계속 유지되며 현재 한 척이 건조되어 시험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즈베즈다 조선소와 기술 파트너로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15척 중 10척에 대한 선박 블록 장비 제작을 중단하였다. 당시 양사가 체결한 선박의 설계 계약 방식은 즈베즈다 조선소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블록 형태로 받아 건조하는 방식으로 선박 5척은 이미 러시아로 인도되었으며 계약은 아직 취소되지 않아 유효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이 5척 중 2~3척 가량이 2024년에 건조되어 운항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현재 제재의 영향으로 북극 LNG-2 운영에 필수적인 2세대 쇠빙 LNG 운반선의 건조와 운영이 취소 또는 지연되고 있어 북극 LNG-2의 운영과 별개로 운송과 물류에 매우 큰 불확실성

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계획으로 러시아는 북극 LNG-2를 위한 쇠빙 LNG선 함대를 건설하려 했지만 현재 북극 LNG-2의 운송에 적합한 유조선은 2~3척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책은행 VE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드레이 클레파흐(Andrei Klepach)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 이후에야 적절한 쇠빙 LNG 운송 인프라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⁵⁾ 이런 점에서 북극 LNG-2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북극 LNG 가치사슬의 운송·물류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LNG 유조선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발생하는 북극 LNG-2의 운송과 물류에서의 제약은 앞으로 러시아 북극 LNG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LNG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운송 및 공급을 희망하지만 이처럼 운송수단의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운송과 물류의 최적화가 어려워져 가스 수출 물량의 감소와 재고 적체가 발생해 생산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러시아의 북극개발 및 북극항로의 개발이 상당 부분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수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던 관련 계획들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④ 북극 LNG-2의 판매

북극 LNG-2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LNG 공급과 판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북극 LNG-2는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에 따라 생산된 가스를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제재의 영향으로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이 계약의 파기나 불가항력 의사를 밝히면서 천연가스의 장기 계약에 따른 판매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극 LNG-2의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기존 계약 물량들을 새로운 현물시장에서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극 LNG-2의 제재 상황과 향후 제재 범위의 확대에 대한 우려로 할인된 가격임에도 현물거래에 임하는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 값싼 가격에 LNG를 공급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나 그 물량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IV. 러시아의 대응과 과제

러시아는 북극 LNG-2를 직접 제재하려는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한 비판을 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는 미국의 2차 제재 발표 직후 “러시아는 많은 국가의 에너지 균형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북극 LNG-2와 같은 대규모 국제 상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세계 경제 안보에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자를 축출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⁶⁾ 동시에 LNG 인프라 개발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의 우선순

5) Reuters, “Lack of Arctic tankers puts Russia’s LNG development dreams on ice” 2023.12.23.

위라며 “러시아 내 그 누구도 북극 LNG-2와 같은 대규모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장애물들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⁷⁾

실제 북극 LNG-2 프로젝트는 일련의 제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3개의 트레인 중 1개의 트레인이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트레인의 모듈은 건설 중으로 이 중 1개 트레인의 경우 2024년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북극 LNG-2에서 첫 화물 선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된 LNG의 경우 아시아 국가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극 LNG-2에 대한 제재 장벽을 상당 부분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당수 기존 서방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한 첫 번째 트레인의 가동과 별개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트레인의 가동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노바텍은 북극 LNG-2의 나머지 건설과 운영을 계속 추진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바텍은 일부 LNG 관련 장비와 기술에서 서방의 지식을 대체하며 나름의 국산화를 달성해가고 있다. 노바텍은 제재 속에서 자체 액화 공정 사용을 목표로 연간 300만 톤의 생산용량을 갖춘 ‘Arctic Cascade’와 연간 600만톤의 생산용량을 갖춘 ‘Arctic Mix’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 기술들은 서방의 기술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나 LNG 생산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히 ‘Arctic Cascade’의 경우, 이미 야말 LNG의 트레인 4에서 시험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미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전반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협력하고 있으며 제재 속에서 노바텍의 자회사나 파트너들이 북극 LNG 사업에 대해 귀중한 경험을 획득해가고 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우호국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플랜트 건설의 핵심인 가스터빈의 조달이 중단되자 중국기업들의 기술을 활용한 다른 터빈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GBS에 사용될 모듈 건설에 문제가 생기자 중국업체들로부터 대신 조달 받고 있다. 또 서방 기업들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바텍의 러시아 자회사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GBS 건설의 경우, 이들 업체들이 프로젝트 진행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어 향후 북극 지역에서의 해당 방식을 통한 LNG 개발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극 LNG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서방 중심의 기존 가치사슬에서 점차 벗어나 자국의 기업들과 중국으로 이를 확대 재편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 러시아-중국 간 하나의 LNG 체인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Upstream, “Russia says US will ‘destroy global energy security’ with Arctic LNG 2 sanctions” 2023.12.27.

7) Reuters, “Russia says It won’t ditch plans to boost LNG output due to US sanctions” 2023.11.09.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극 LNG-2를 운영하고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먼저,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북극 LNG-2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핵심 부품 등을 비롯해 러시아 현지나 중국산 장비와 기술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트레인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장기적으로 신뢰성이나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있어 계획보다 트레인의 생산량이 적을 수 있고, 차후 생산량 증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적인 사업의 성공까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등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재망의 강화 속에서 북극 LNG-2의 첫 번째 트레인이 가동되고 있지만 결국 사업의 관건은 생산된 가스의 운송과 판매이다. 언급한 바처럼 러시아는 앞으로 쇠빙 LNG선의 부족 문제로 북극 LNG-2의 운송과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2개의 환적 허브 사용이 쉽지 않게 되었고, 선박 건조 협력도 중단되었다. 이에 러시아와 노바텍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앞으로 러시아는 조선의 모든 측면을 국산화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LNG의 판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제재 상황 속에서 북극 LNG-2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요처를 찾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저렴한 현물거래와 일부 물량의 유럽 수출을 제외한다면 다른 마땅한 옵션이 많지 않다. 이에 유럽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새로운 판매처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북극 LNG-2의 최대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며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연간 1억 톤으로 늘려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을 8%에서 20%로 높이려는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장기 에너지전략에서 북극을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의 중심지로 지정하고 상당한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LNG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런 러시아의 야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들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러시아 천연가스와 북극 LNG-2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는 북극 LNG 가치사슬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운영과 성공에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투자자의 구매계약 파기와 금융제재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있으며 서방 기업들의 철수, 부품과 기술 등의 수출금지로 플랜트의 건설이 지체되었다. 또 환적터미널에 대한 제재와 금융제재, 향후 제재의 확대 우려로 인한 쇠빙 LNG선의 계약 파기로 LNG의 운송과 물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나름의 방식과 노력을 통해 북극 LNG-2의 실질적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LNG 장비와 기술을 조금씩 국산화해나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방을 대체하는 새로운 LNG 가치사슬을 구축해감으로 북극에서 LNG 사업의 경험들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의 대응에도 플랜트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 지나친 대중국 의존도, LNG 운반선의 부족과 판매처의 문제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도 확인하였다.

서방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해 전쟁 자금의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한발 나아가 북극 LNG-2 등 러시아의 북극 LNG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LNG 공급망을 재편해 유럽 가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러시아와의 LNG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극 LNG-2에 대한 제재는 프로젝트의 진행과 북극 LNG 가치사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서방의 제재가 북극 LNG-2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 정도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북극 LNG-2의 잠재력을 최대한 제약하여 세계 LNG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는 러시아의 열망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문헌]

배규성, “‘북극 LNG-2’ 2차 제재: 미국의 의도와 러시아의 대응,” Russia-Eurasia FOCUS 제 768호(202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No 1523-р. 06.09.2020.

U.S.Department of State, “Imposing Further Sanctions in Response to Russia’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2023.09.14.

U.S.Department of State, “Taking Additional Sweeping Measures Against Russia,” 2023.11.02.

U.S.Department of State, “Assistant Secretary Geoffrey Pyatt’s Remarks at the 8th HAEE Energy Transition Symposium: The Complex Geopolitical Reality & the Energy Transition” 2023.09.27.

High North News, “New US Sanctions Target Russia’s Arctic LNG-2 Our Objective is to Kill that Project” 2023.11.13.

(<https://www.highnorthnews.com/en/new-us-sanctions-target-russias-arctic-lng-2-our-objective-kill-project>)

<https://www.kommersant.ru/doc/5986377>

Reuters, “Lack of Arctic tankers puts Russia’s LNG development dreams on ice” 2023.12.23.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lack-arctic-tankers-puts-russias-lng-development-dreams-ice-2023-12-22/>)

Upstream, “Russia says US will ‘destroy global energy security’ with Arctic LNG 2 sanctions” 2023.12.27.

(<https://www.upstreamonline.com/lng/russia-says-us-will-destroy-global-energy-security-with-arctic-lng-2-sanctions/2-1-1576605>)

Reuters, “Russia says It won’t ditch plans to boost LNG output due to US sanctions” 2023.11.09.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ays-it-wont-ditch-plans-boost-lng-output-due-us-sanctions-2023-11-0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의 외교정책과 북극 밸런스

이주연
(한양대학교)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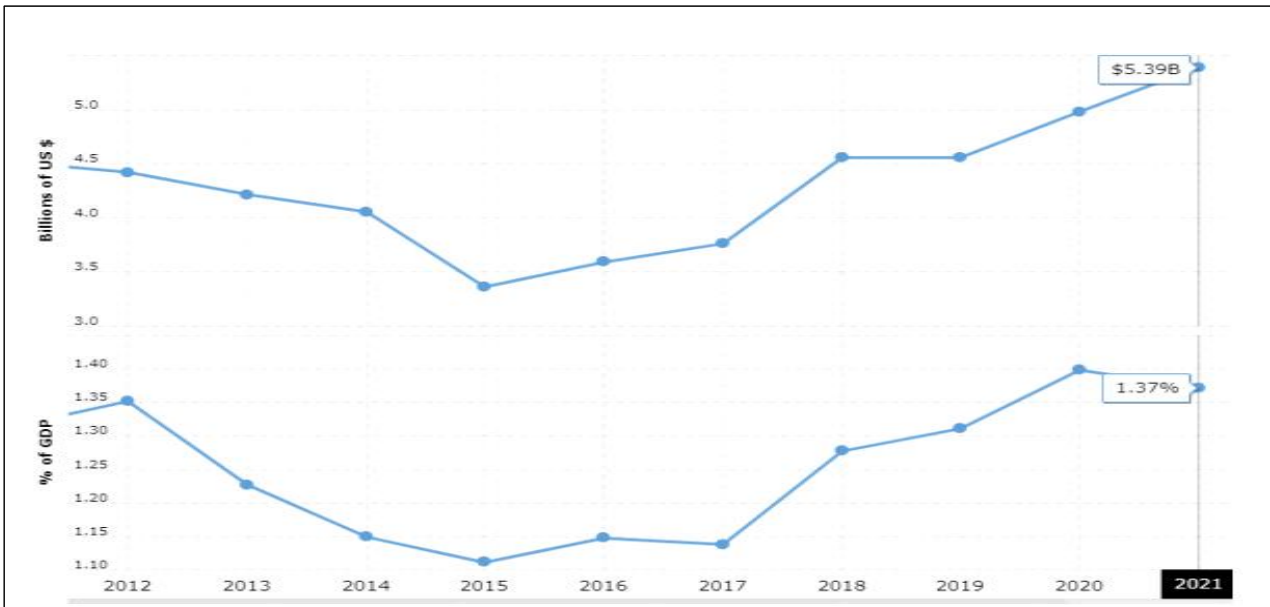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비롯하여 약 3,300억 원 이상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덴마크 지원의 원인 덴마크의 국가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북유럽 국가이지만 서유럽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제협력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경제 질서 확립을 외교 목표로 추구하고, 범세계적 인권 존중 및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덴마크는 EU, NATO 및 북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서방국가와 정치, 군사,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친서방 대외정책 노선으로¹⁾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서유럽과 한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러시아 리스크에 대응은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6월 덴마크 정부는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7~2018년 덴마크 외교 중점분야를 새롭게 설정하기도 했다. 특히 덴마크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통해 덴마크의 역할을 강화하길 원했다.

2018년 1월 덴마크 국방안보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덴마크 의회의 국방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문에는 ▶ 2023년까지 국방 예산 20% 이상 증액, ▶ 나토 및 다국적 연합군 활동 강화, ▶ 치안 및 대테러 역량 강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 적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지만, 2018년 덴마크 국방 예산이 45억 6천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하여 21.11%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자주성을 향상하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1) “덴마크 개황,” (외교부, 2018), 32쪽.

<그림 1.: 덴마크 국방비 예산 추이>



출처: macrotrends

앞선 내용을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덴마크는 대외 환경 특히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즉, 러시아 리스크에 대응하여 외교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리스크에 대응하는 덴마크의 외교정책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변화일 것인가? 그리고 덴마크 외교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덴마크 외교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2장에서 덴마크 외교정책의 특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 외교정책의 특징을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2. 덴마크 외교정책의 특징

덴마크 외교정책의 특징을 정의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우선 ‘노르딕 밸런스’이다. 노르딕 밸런스는 서방과 소련 사이의 북유럽 국가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으로 서방과 소련 중 스웨덴은 중립, 핀란드는 친소,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친서방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덴마크가 친서방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소련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했다. 결국 덴마크는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여 NATO에 가입하여 안보위협에 대처하지만,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NATO와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령 덴마크는 1953년 덴마크 영토 내 나토군 주둔 요청을 거절했다.²⁾ 즉, 외국군이 자국 영토 내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일정 부분 힘의 균형점을 맞추려고 한 것이다.

2) 김진호, “북유럽 평화체제로서 노르딕 밸런스,” <동북아시아논총>, 제15권, 1호 (2004), pp.111-116.

둘째, ‘적극적 국제주의’와 ‘선택적 협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영주는 브래너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덴마크가 냉전시기에 ‘(나서기) 주저하는 국가(foot dragging state)’로 소극적 외교정책을 수립했지만,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 구조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국제주의’로 덴마크 외교정책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 외교정책의 목표는 공동안보 확산, 민주주의와 인권의 고양, 경제 및 사회발전의 창조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유지 등이 있으며, 이것은 덴마크적 가치와 이익을 고취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통적 외교정책과 차별성이 있다.³⁾

한편, 덴마크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에 참여 방식에서 ‘선택적 협력’의 관점으로 덴마크 외교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EU와의 협력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CFSP와 군사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안보 위협을 나토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⁴⁾ 즉, 공동안보 창조는 UN과 나토에 치중하면서 외교, 정치 역할은 CFSP로 실현하는 선택적 협력의 특징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이다. 브래너(Branner)의 주장에 따르면 덴마크 외교정책은 크게 3번의 변화의 기점이 있었다. 우선 1864년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배함에 따라 덴마크는 영토 1/3이 감소했고 이후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발생했다. 따라서 1864년 이후 덴마크는 다소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 개입을 피하고, 이웃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중립정책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립정책의 영향으로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모면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냉전 시기 덴마크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나토에 기여하는 국방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의 균형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자연스럽게 덴마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이에 덴마크는 줄어든 지위를 보상하기 위한 독립적 외교정책이 필요해졌다.⁵⁾

다시 말해 탈냉전기 이후 중립주의와 다자주의를 넘어 행동주의로 덴마크 외교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덴마크 외교정책의 중립주의의 특징으로 우선 폭력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인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외교정책보다 소극적 입장으로 국제 정치에 얽히지 않고, 지배적인 동맹국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독립적인 계획과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덴마크 외교정책이 국제 문제에 변화를 일으키고, 어느 정도 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3) 황영주, “‘적극적 국제주의’와 ‘선택적 협력’: 덴마크의 EU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대한 접근 (1993-1999),”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2004), pp.105-106.

4) Ibid., pp.107-111.

5) Hans Branner, “Denmark Between Venus and Mars: How Great a Change in Danish Foreign Policy?” in Nanna Hvidt and Hans Mouritzen, Danish Foreign Policy Yearbook 2013 (DIIS, 2013), pp.140-146.

협력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자국이 소규모 국가협력, EU, NATO, UN 등 국제기구에 영향을 주고 지원을 받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⁶⁾

앞선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덴마크 외교정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정책에서 낮은 주도성이다. 덴마크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보다는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지지자 역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NATO, EU, UN 등 국제기구와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도 변화이다. 덴마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 균형점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환경에서 힘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균형 방향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주변 상황에 따라 협력의 크기, 자국의 참여도 등이 변할 수 있다.

셋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헷징(Hedging)’이다. 덴마크는 특정 세력, 국가, 집단에 완전히 종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긴 위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EU, NATO 등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얻는 이득과 손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교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 외교정책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유럽연합 방위 오프아웃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본래 덴마크는 ‘유럽 안의 덴마크’라는 제목의 합의문을 통해 덴마크 내 유럽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네 가지 오프아웃을 명시했고,⁷⁾ 1992년 12월 덴마크 요구사항이 승인되어 에든버러 협정(Edinburgh agreement)가 체결되어 오프아웃 조항을 포함한 마스 크리히트 조약이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⁸⁾

물론 오프아웃 폐지 논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오프아웃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덴마크는 NATO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덴마크 영토보전에 집중한 안보전략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NATO의 집단적 억제 및 방어를 우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민투표에서 66.9% 찬성으로 오프아웃이 폐지되었다.⁹⁾

6) Ibid., pp. 136-138.

7) 오프아웃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덴마크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과의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 2)유럽경제통화동맹의 세 번째 단계인 단일통화 및 경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유럽공동체의 시민권이 덴마크의 시민권을 대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4)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 주권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다.

8) 오창룡, “우크라이나 위기와 덴마크의 방위전략 변화: 2022년 유럽연합 방위 오프아웃 폐지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9호 (2022), pp. 119-125.

9) Ibid., pp. 126-128.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다소 외교정책에 적극성이 가미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 나토 중심의 안보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덴마크 정부와 국민이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은 덴마크의 '2023년 외교안보정책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왜냐면 세계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을 냉전 종식, 9.11테러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서에서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면서 새로운 안보 상황에서 외교안보 전략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응하여 덴마크는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덴마크의 국방력을 증가시키고, NATO와의 역지력과 안보에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적시했다. 특히 덴마크 외교정책은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를 중요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 외교정책에서 자유주의 가치의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자국과 자유주의 질서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예상할 수 있다.¹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의 안보 대응은 2023년 외교안보정책전략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서에서 덴마크는 유럽의 국방 및 안보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증가하고, NATO의 협력과 EU 내 국방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발트해 지역의 북유럽 국가와의 국방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훈련 활동 및 국방 계획을 조정하고, 발트해 지역 국가협력에서 덴마크의 주도적 역할을 추구할 것임을 적시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극과 북대서양 조향에서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극 지역이 새로운 대결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했다는 점이다.¹¹⁾

한편, 외교안보정책전략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자유를 위한 군사 무기, 군사 물자, 훈련 등을 지원, 우크라이나 재건설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덴마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 기회를 제공, 우크라이나의 NATO, EU 가입 지원 등이 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는데 러시아의 침략행위가 러시아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조치,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 견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²⁾

10)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trate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pp. 6-7.

11) Ibid., pp. 12-15.

12) Ibid., pp. 12-15.

4. 결론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덴마크 외교정책의 시사점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주의 관점에서 덴마크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지분이 강화했다는 것이다. 덴마크 국방비 GDP의 2%까지 확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민간 부문의 적극적 지원은 덴마크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 문제에 대한 덴마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선택적 협력의 포기과 적극적 국제주의의 강화이다. 덴마크는 30년간 유지했던 선택적 협력의 기초를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 국제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셋째, 서방과 러시아의 밸런스 붕괴와 새로운 지역 밸런스이다. 기존의 노르딕 밸런스는 서방과 소련 사이의 밸런스였고, 이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밸런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상 노르딕 밸런스 기초는 붕괴했고, 친서방 대외정책 노선이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북극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고,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덴마크는 북극 지역에서 균형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덴마크 외교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주도적 역할의 한계성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덴마크의 적극적 지원은 행동주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역할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덴마크의 역량의 문제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북유럽 국가 중 주도적 입장이다. 그러나 덴마크가 입지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있다. 둘째,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의 한계점이 있다. 덴마크는 EU, NATO 등 국제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EU, NATO의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덴마크의 지원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

둘째, 북극 공간의 안보 위협 증가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군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고 있고, 이것은 역설적이게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러시아는 핵사용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극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핵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러시아의 국력 하락은 중국의 북극지역 개입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북극 지역 질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극 지역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하는 정책에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김진호, “북유럽 평화체제로서 노르딕 밸런스,” <동북아시아논총>, 제15권, 1호 (2004).
“덴마크 개황,” (외교부, 2018).

오창룡, “우크라이나 위기와 덴마크의 방위전략 변화: 2022년 유럽연합 방위 옵트아웃 폐지 국민 투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9호 (2022).

황영주, “‘적극적 국제주의’와 ‘선택적 협력’: 덴마크의 EU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대한 접근 (1993-1999),”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2004).

”Danish Support for Ukrain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23)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trate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Hans Branner, “Denmark Between Venus and Mars: How Great a Change in Danish Foreign Policy?” in Nanna Hvidt and Hans Mourizen, *Danish Foreign Policy Yearbook 2013* (DIIS, 2013).

북방의 소수민족 아이누

장하영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 일본 정부의 아이누 민족에 대한 ‘원주민’ 공식 인정

2019년 4월 19일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민족을 600년 만에 처음으로 ‘원주민’으로 인정했다. 일본 의회는 아이누 족을 원주민으로 명시하고 아이누 민족 문화 계승과 관광 진흥을 위한 기금 창설 등을 포함한 법률을 통과시켰다.¹⁾ 일본 정부는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 즉 ‘원주민’으로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그들이 민족으로서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아이누 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누 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자 손에게 아이누 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아이누 민족이 빈곤이나 실업을 겪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비율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 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려는 것에 대해 그들 중 상당수가 쿠릴 4개 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²⁾ 쿠릴 4개 섬은 홋카이도 북부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위치한 일련의 섬들 중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4개의 섬을 의미한다.³⁾ 이 섬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많은 아이누 족이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이누 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쟁 섬들이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에 힘을 싣게 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18년 12월 쿠릴 4섬에 거주하는 아이누 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정부도 아이누 족을 자신의 국가에 속한 원주민이라고 밝힘으로써 쿠릴 4개 섬은 러시아의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

1) 머니투데이 (2019.04.22.) “600여년 ‘핍박’ 아이누 소수민족 인정…일본, 사과는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2208542359827> (검색일: 2024.02.09.)

2) 동아일보 (2019.02.15.), “日, 카이도 소수민족 ‘아이누족’ 돌연 원주민 인정…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용?”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215/94126915/1> (검색일: 2024.02.08.)

3) 쿠릴 4개 섬은 쿠나시르,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를 의미한다. (위키백과, “쿠릴열도 분쟁,” https://ko.wikipedia.org/wiki/%EC%BF%A0%EB%A6%B4_%EC%97%B4%EB%8F%84_%EB%B6%84_%EC%9F%81, 검색일: 2024.02.10)

나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누 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아이누 족은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과 러시아의 사할린, 캄차카 지역에 걸쳐 매우 오래 전부터 거주했던 민족이었지만, 오랫동안 양국에게서 각 국가의 민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오늘날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자, 양국 모두 아이누 족을 자국 영토의 원주민으로 인정하며 영토 소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치적 이용의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누 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며, 현재 아이누의 정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아이누는 어떤 민족인가?

<그림 1> 아이누 민족의 분포도⁴⁾



아이누 민족은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열도, 캄차카 반도에 분포하여 살아온 민족이다. ‘아이누’라는 용어는 아이누어로 ‘인간’을 뜻한다.⁵⁾ 홋카이도에는 약 3만 년 전부터 아이누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석기를 이용하여 사냥이나 수렵을 하며 생활했다. 약 1만년 전에 아이누는 활 화살과 낚시를 사용했고, 조몬⁶⁾ 토기를 이용했다. 13세기가 되어 홋카이도 아이누는

4) Nupurpet, " 아이누民族とは？ "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about/> (검색일: 2024.02.12.)

5) Ibid.

6) 조몬 문화[繩文文化, 조몬 시대]는 기원전 1만여 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 번성하였던 선사시대 문화를 가리킨다. (두산백과, “조몬 토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55579&cid=40942&categoryId=33369>, 검색일: 2024.02.17)

사할린 및 쿠릴 열도 사람들과 교역을 했다. 18세기에는 교역의 주도권이 일본인 상인에게 넘어가면서 아이누는 멀리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에조 땅⁷⁾이 홋카이도로 일본에 편입되고, 아이누는 국가의 동화정책에 따라 ‘일본인화’되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었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기에 아이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런 와중에 아이누 족은 자신들만의 학교를 만들어 교육에 힘쓰기도 했다.⁸⁾

<그림 2> : 홋카이도의 아이누 족⁹⁾



아이누 민족은 자연과 인간이 만든 도구도 ‘카무이’라는 신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카무이’가 동물이나 도구로 모습을 바꾸어 인간의 세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¹⁰⁾ 아이누는 동물을 잡아 고기와 모피를 얻거나 도구가 부러졌을 때 카무이를 신들의 세계로 돌려주는 ‘보내기’라는 의식을 실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보내줌으로써 다시 자신들에게 모습을 바꾸어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아이누 신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자연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물, 불, 생활도구, 그리고 날씨와 같이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것을 ‘카무이’로서 존경했다. 아이누의 믿음에서 이 세계는 인간과 카무이가 서로 연관된 영향을 미치고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¹¹⁾ 이렇게 아이누 민족은 자연의 은혜를 입으며 고유의 언어를 지니고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는 등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지니며 살아왔다.

7) 일본사에서 동북 지역을 일컫는 말.

8) Nupurpet, "アイヌの歴史、"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history/> (검색일: 2024.02.13.)

9) Дзен, "Кто такие айны и почему и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в России скрывают," <https://dzen.ru/a/XROP5G2cAACwQYOo> (검색일: 2024.02.14.)

10) Nupurpet, "カムイー信仰、祈りー、"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deities/> (검색일: 2023.02.14)

11) あかれんが, "カムイへの祈りー信仰、" <https://www.akarenga-h.jp/hokkaido/ainu/a-03/> (검색일: 2023.02.14)

3. 일본과 러시아의 아이누: 동화와 차별의 역사

1) 일본의 아이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아이누가 살고 있던 에조 땅을 홋카이도로 명칭을 바꾸었고, 강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만들어 현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일본인화’ 했다. 정부는 아이누가 일본인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동화정책’을 펼쳤고, 그들 고유의 문화를 금지시켰다. 또한 사냥이 금지되거나 토지를 빼앗기게 되어 점점 아이누들은 독자적인 생활양식과 문화를 잃어갔다. 게다가 아이누어의 사용이 금지되어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해야 했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빈곤하게 살아야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아이누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자신들이 아이누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다수 존재하며, 학교나 직장, 결혼 때에도 그들은 차별을 받으며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아이누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이누 족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이누의 문화를 전승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2) 러시아의 아이누

러시아에서도 아이누 족들은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견뎌왔다. 17세기 말, 러시아 개척자들이 처음 아이누 족을 만나 그들을 친구로 인정했으며, 18세기 중반에는 아이누 족의 대표 1500명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¹²⁾ 그러나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의해 쿠릴열도가 일본에 양도되었을 때 쿠릴열도에 거주한 모든 아이누의 정착촌이 일본 소유의 땅이 되었다. 러시아에 남길 원했던 83명의 아이누 족들은 1877년 캄차카의 야비노(Yavino) 마을에 정착했고, 근처인 골리기노(Golygino)에도 아이누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1904년~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후 아이누족은 일본으로 쫓겨났고, 90%이상의 아이누가 러시아를 떠나 일본으로 이주했다.

소련시기에도 당국은 아이누가 살고 있는 골리기노와 야비노 마을을 없앴고, 아이누 족들을 자포로제(Zaporozhe)라는 마을로 보냈으며, 그들은 캄차카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다. 1930년대에 아이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굴라그(노동수용소)’로 추방되었다. 당국은 아이누 족을 일본인으로 간주했고, 아이누 족들에게 성을 러시아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자, 일본인 송환 문제에서 아이누 족은 러시아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강제로 일본에 건너가 홋카이도에 모여 살게 되었다.¹³⁾ 그리고 1979년 아이누라는 민족 이름은 소련의 공식적인 집단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아이누는 멸종되었다고 선언되었다.¹⁴⁾

12) Рамблер, “Айны: судьба самого загадоч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и,” <https://weekend.rambler.ru/read/50471824-ayny-sudba-samogo-zagadochnogo-naroda-rossii/> (검색일: 2024.02.15.)

13) Дзен, “Кто такие айны и почему и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в России скрывают,” <https://dzen.ru/a/XROP5G2cAACwQYOo> (검색일: 2024.02.14.)

14) Ibid.

이렇게 아이누 족은 러시아에서도 착취와 억압을 받았으며, 많은 아이누 족들이 러시아에서 일본 영토로 이주해왔다. 러시아 학자들도 홋카이도 아이누 족의 상황이 러시아 쿠릴열도에 살고 있는 아이누 족보다 낫다고 인정했다. 러시아의 아이누는 소수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했고,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아이누라고 칭하는 사람은 109명이고 그 중 94명이 캄차카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러시아에 더 이상 순수 아이누 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⁵⁾

4. 현재의 아이누: 정체성과 다양성, 정부의 대처

일본과 러시아에서 아이누 문화는 현재까지 많이 소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아이누 문화를 살리고 전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많은 아이누인들이 자신이 아이누임을 밝히고 아이누 문화를 알리며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시로노마치(Shironomachi)에서는 아이누 문화 부흥센터인 ‘우포포이’가 설립되었다. ‘우포포이’는 ‘민족 공생의 상징 공간’으로서 아이누 문화의 부흥, 발전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아이누 박물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누의 생활과 전통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일본 사회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원주민으로서의 아이누를 존중하며 보호·계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 1997년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의회에서는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2007년 유엔총회에서 ‘원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아이누 사람들의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¹⁶⁾ 2019년 ‘아이누 시책 추진법’의 시행은 지역, 사업, 관광 진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아이누 족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아이누 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아이누 족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부심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도 아이누 족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누 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목표로 계발 영상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아이누인들을 위한 상담 사업」을 개시하는 등, 인권 상담이나 구제 활동도 실행하고 있다.¹⁷⁾

15) Рамблер, “Айны: судьба самого загадоч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и,” <https://weekend.rambler.ru/read/50471824-ayny-sudba-samogo-zagadochnogo-naroda-rossii/> (검색일: 2024.02.15.)

16) Ministry of Justice, “アイヌの人々に対する偏見や差別をなくそう,” https://www.moj.go.jp/JINKEN/jinken05_00004.html (검색일: 2024.02.15.)

17) Ibid.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는 아이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전승·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김새와 혈통에 관한 편견으로 대다수의 아이누 족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누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홋카이도 도내의 아이누 족은 약 1만 3000명이며, 이는 2006년 2만 4000명에서 현저히 감소한 숫자이다.¹⁸⁾

5. 결론을 대신하여

아이누 족은 일본과 러시아의 근대화 및 국가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족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했던 된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누 족을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2019년이 되어서야 아이누 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강력한 일이었다. 뒤늦게 일본이 아이누 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여, 외부로부터는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 문제를 일본 측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전부터 아이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아이누 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는 일본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와중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아이누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소멸되어가는 아이누 문화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아이누 족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아이누임을 밝히고 전통문화를 알리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이누 족들은 이미 소멸 위기에 이르렀고, 아이누를 살리기 위한 일본 사회와 정부의 노력은 너무 늦었다. 러시아 정부의 아이누 족에 대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인정 조치도 마찬가지다.

소멸되어 가는 소수민족인 아이누 족을 연구하고 그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전통 보존에 대한 필요성 등의 교훈을 심어준다. 그들의 전통문화가 존중받으며 보전되기 위해, 아이누 족을 민족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 Ainu guide, “人口の推移”

[참고문헌]

동아일보 (2019.02.15.), “日, 카이도 소수민족 ‘아이누족’ 돌연 원주민 인정…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용?”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0215/94126915/1> (검색일: 2024.02.08.)

두산백과, “조몬 토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55579&cid=40942&categoryId=33369>, (검색일:
 2024.02.17.)

머니투데이 (2019.04.22.) “600여년 핍박' 아이누 소수민족 인정…일본, 사과는 없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2208542359827> (검색일: 2024.02.09.)

위키백과, “쿠릴열도 분쟁,”
https://ko.wikipedia.org/wiki/%EC%BF%A0%EB%A6%B4_%EC%97%B4%EB%8F%84_%EB%B6%84%EC%9F%81, 검색일: 2024.02.10.

Ainu guide, “人口の推移”

Ministry of Justice,
 “アイヌの人々に対する偏見や差別をなくそう.”https://www.moj.go.jp/JINKEN/jinken05_00004.html
 (검색일: 2024.02.15.)

Nupurpet, “アイヌ民族とは?”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about/> (검색일:
 2024.02.12.)

Nupurpet, “アイヌの歴史、”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history/> (검색일:
 2024.02.13.)

Nupurpet, “カムイー信仰、祈りー、” <http://www3.city.noboribetsu.lg.jp/ainu/deities/> (검색일:
 2023.02.14.)

あかれんが, “カムイへの祈りー信仰、” <https://www.akarenga-h.jp/hokkaido/ainu/a-03/> (검색일:
 2023.02.14.)

Дзен, “Кто такие айны и почему их существование в России скрывают,”
<https://dzen.ru/a/XROP5G2cAACwQYOo> (검색일: 2024.02.14.)

Рамблер, “Айны: судьба самого загадочного народа России,”
<https://weekend.rambler.ru/read/50471824-ayny-sudba-samogo-zagadochnogo-naroda-rossii/>
 (검색일: 2024.02.15.)

툰드라의 교육

김자영
(원광대학교)

I. 서론

시베리아와 극동, 북극을 포함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북방지역에는 라이폰(RAIPON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기준 40개의 토착민(원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극북지역인 툰드라 지대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일부 타이가 지대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유엔의 원주민 권리 선언 <원주민은 누구인가>에 따라 원주민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자신이 원주민이라는 개인의 정체성 및 원주민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
- ✓ 식민지 이전 정착민 사회와의 역사적 연속성
- ✓ 해당 지역의 영토 및 주변 천연자원과의 강력한 연결성
- ✓ 해당 국가의 지배적인 주류가 아니며 개발의 단계가 낮은 집단
- ✓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유의 뚜렷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
- ✓ 조상의 환경과 체제,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열망

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북방지역 토착민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특징적 민족그룹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질 것
- ✓ 특정 지리적 영역에 토착하여 거주하며 그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관련성이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 ✓ 인구규모가 5만 명을 넘지 않을 것
- ✓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할 것.

러시아 북방 지역에 이러한 민족그룹의 숫자는 약 2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전통적인 유목 및 반유목생활을 이어나가며 혹독한 북방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들의 전통적 생활방식은 지구 상 독특한 문명이면서 동시에 극지방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북방지역의 툰드라와 타이가 지대에 흩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던 토착민족들이 각 민족별 공동체의 자치적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극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집단적 생존의 방식이었으며, 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의 형태, 모국어, 물질적·정신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북방 지역의 광활한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러시아인의 북방 진출 이후 시작된 전통적 문화 규범과 가치체계의 파괴이다. 이는 곧 문자 그대로 ‘소수민족’으로의 전락과 소멸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오랜 가치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근면성, 전통에 대한 연속성, 고유한 민족적 집단주의에 있으나 이는 러시아인의 북방지역 진출 이후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고 소비에트 시대를 거쳐 강제적 동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러시아 북방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으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토착민들이 언어와 전통적 경제활동, 생활관습 등에서 벗어나 도시에 정착하거나 러시아화 되는 숫자가 적지 않아 종족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라이폰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련 당국이 이들의 동화정책을 위해 강제적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이주시켜 집단농장에 연결하고 정주민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생활방식과 자녀교육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늘날 전통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20년대 이후 소련식 기숙학교의 도입으로 점차 고착되었다.

18세기 이후 러시아인의 러시아 북부, 북극, 시베리아, 극동(북방) 지역으로의 진출 이후 진행된 러시아화 및 기독교화 정책은 선교학교와 기숙학교 제도를 통해 토착민들을 기독교인이자 러시아문화에 동화된 제정러시아 및 소련의 국민으로 정착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 북방토착민들에게 이른바 ‘민족부흥의 시대’가 도래한 뒤 토착민 자치 지역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하공화국과 부족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 삶의 복구 및 보존 없이 민족 정체성의 보존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 활동의 보존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러시아라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충돌 없이 민족정체성을 보존하는 문제; 오랜 러시아화의 역사 속에서 이미 전통을 벗어난 현대적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토착민 청년세대의 전통적 삶으로의 복귀 거부 혹은 어려움(여기에는 민족어의 상실, 순록목축과 가축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방법 등의 상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청년세대가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 등의 모순적 요소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공존한다.

1990년대부터 북방국가위원회, <모두를 위한 교육: 유목민 생활 방식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교육개발 전망>을 위한 국제포럼 등을 통해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한 여러 사회

적 논의가 진행된다. 북방 토착민들은 보편교육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기존의 일방적 기숙학교제도에서 벗어나 가족 및 민족공동체, 자연, 고유의 경제활동 방식 등에서 유리되지 않은 채 필요한 현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교육제도의 대안을 유목학교에서 찾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북방 민족그룹이 러시아인의 동지역 진출 이후 러시아화, 유목적 전통과 정체성의 소실, 현대사회에 대한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친 교육제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서, 토착민 출신 아이들의 교육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북방 토착민들의 문화부흥 시대를 맞아 이들이 현대 러시아연방의 국민으로 조화롭게 살면서 동시에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나 가는데 있어 유목학교의 특징과 비전에 대해 사하공화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전통문화와 언어의 보존과 계승은 토착유목민족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기초이자 독창성의 필수 원천이 된다. 사하공화국 등 러시아 북방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토착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토착유목민족 고유의 윤리적 규범, 철학, 정신문화, 가치체계는 언어를 통해 전승되며 순록 목축과 유목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형태를 통해 확고해지기 때문이다. 토착민들은 북방지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민족적 특성, 문화적 독창성,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러시아 사회공동체에 속하는 시민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토착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문제는 “순록이 없으면 종족이 없다”는 토착민 속담을 되뇌이는 전통주의자들의 의견에 토착민 청년세대가 적극적인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세대의 교육받을 권리,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러시아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방 토착민의 전통적 삶을 유지·보존할 방법은 무엇인가. 토착민들은 이것을 보편교육의 개선에서 찾고 있다. 학교는 교육 기능 외에도 사람들의 민족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략과 내용은 지역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공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1. 토착민 교육의 역사와 현황

1.1. 제정러시아 시대

러시아인이 본격적으로 북방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18세기 초 제정러시아가 중앙으로부터 먼 새로운 식민지 북방지역과 토착민을 관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주요방향이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업과 교육이다. 슬라브문화와 기독교, 러시아어를 전파하여 식민화 과정을 강화하고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회를 활용했다.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광범위

한 선교활동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면서 1703년 레친스키 주교의 집에 선교학교가 열렸다. 이러한 과정은 원주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던 19세기 이후 선포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육 조치(1870)>, <외국인을 위한 초등학교에 관한 규정(1907)>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토착민 아동을 선교학교로 데려가는 것은 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지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어로만 진행되는 교육으로 인해 토착민 아이들에게 기독교와 슬라브 문화를 주입시키고 점진적으로 유목 전통에서 벗어나 러시아제국에 동화시킨다는 목적을 크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토착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제적인 선교학교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교육자들에 의해 최초의 유목학교가 시도된다. 바자노프와 카잔스키와 같은 교육자는 콜라 반도의 순록 목축업을 하는 사미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이들 유목민 가족의 이동경로를 따라 거주지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유목학교’는 계절과 장소의 문제로 인해 연중 지속되는 날이 많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미미했다.

1.2. 소련시대

소련이 성립되면서 전국적인 보편교육 제도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먼 북방지역에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유목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완전히 마련되지는 못하였고 기숙학교 제도가 시도되었다. 기숙학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20~1930년대 초: 북방민들을 위한 기숙학교가 출현한다. 이 시기에는 토착민의 민족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

1930년대 중반~1950년대 후반: 기숙학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모국어 수업은 전면적인 러시아어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1950년대 말~ 1980년대 중반: 보편적 중등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기숙학교는 부모들로부터 토착민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징발’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 아래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러시아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유목생활을 접고 일정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정착민에게도 징발은 예외가 아니었다. 토착민 아이들은 모두 기숙학교에서 러시아식 삶의 방식을 교육받아야 했다.

기숙학교가 북방지역 토착민들을 위한 보편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초기 선교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부모와 민족공동체로부터 강제 분리되어 러시아식 교육을 받고 전통적인 순록목축이나 이동생활을 위한 기술, 전통적 관습 등을 습득하지 못한 채 ‘러시아화’ 되는 문제는 토착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자체를 균열시키는 문제였다. 도시생활과 많은 것이 저절로 제공되는 기숙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은 툰드라로 돌아가서 혹독한 유목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곤 했다. 부모와의 이른 이별, 러시아어라는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낯선 문화적, 일상적 관습을 수용해야하는 어려움 등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했다. 동시에 기숙 학교에서 이루어진 전통과의 단절은 혹독한 툰드라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또 다른 문제를 동반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북방지역에서 기숙학교는 보편교육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유목민을 정착시키고 목초지를 산업용으로 차출하는 등 순록사육이 점차 쇠퇴한 것 역시 기숙학교를 통한 보편교육의 정착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러시아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식 보편교육 의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고, 민족어 교육 및 민족 문화 교육의 도입, 유목학교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3. 개방이후

1992년 <교육관리의 분권화에 대한 규정> 덕분에 북방지역 행정부는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다시 한번 툰드라시대에서 문명의 혜택을 벗어나 장기적인 이동생활을 하고 썰매를 만들거나 고치는 기술, 순록 목축, 사냥, 모피작업 등은 긴 시간 어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체득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기술이며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아이들에게 민족전통을 교육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의 부활이 북방 토착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 시작이라는 교육적 담론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토착민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는 7-9년제로 운영되는데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은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0학년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종의 유치원 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와 교육과정을 온전히 수용하여 일정 결과를 성취하는데 있어 과거 대비 큰 효과를 얻는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9개월가량의 짧은 교육기간 역시 다른 러시아 아이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데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북방 토착민들은 수세기 동안 주변 기후 및 자연과의 긴밀한 조화 속에서 신선한 순록고기, 야생열매, 물고기와 같은 전통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도시생활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면역체계의 교란과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존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체득하던 아이들이 기숙학교에 있는 동안 섬세한 유목민 특유의 특성들이 둔화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졸업 후 공동체로 돌아간다 해도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착민 아이들은 양쪽 생활방식 모두에서 적응장애를 겪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20년간의 논의와 관심 끝에 북방 지역에서는 유목학교의 실질적인 부활을 통한 새로운 문화부흥의 시대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새로운 문화부흥에 관한 담론을 통해 북방지역 보편교육의 새로운 교육 형태는 아이들의 이중사회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교육이 민족그룹의 고유성과 자존감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리고 기숙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목학교의 부활이 추진된 것이다. 1990년

대 이후 유목학교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련 해체 이후 30년의 세월 속에서도 유목학교 문제가 이전의 소련식 공교육처럼 완전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목 학교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1) 전통 문화와 언어의 보존, 필요한 경제 기술 교육(순록 목축, 낚시, 사냥) 2)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부모가 교육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 3) 유목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순록 목동을 위한 보편적 교육에 대한 권리 구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유목학교

제정러시아의 북방진출 이후 1800년대 후반 알렉산드르 2세의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지던 시기 토착민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당시 지식인계급은 북방 토착민들이 민족어로 교육 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민족공동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토착민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유목민 거주지 근처에 개설하려는 시도를 했고, 1880년대 사미족을 위한 최초의 이동학교가 개설되었다. 교사가 직접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사미족의 유르트를 방문하여 계절에 맞는 학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러시아 유목학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870년대 인텔리겐치야 계급의 ‘브나로드’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부 지식인과 사제들은 고정된 시설물이나 건물이 필요 없기에 이러한 이동식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사들이 유목민 거주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썰매와 순록, 모피, 텐트, 하인 등이 필요했기에 기대 이상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다. 교사의 ‘열정’ 외에 조직적인 계획이 없이 시작되었던 이 ‘교육 실험’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나 토착민 교육에 있어 큰 획을 긋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북방 민족들이 ‘문화부흥의 시대’를 맞으면서 소련 시기에 축적된 문제들을 보편교육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숙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유목학교의 부활이다. 소련 해체 이후 최초의 유목학교 시도는 사하공화국이었으며 사하공화국의 시도 이후 야말로-네네츠자치구와 아무르 등의 지역으로 조금씩 확대되었다.

사하공화국의 유목교육부의 문서에 따르면 공화국이 추구하는 유목학교의 목표는 ‘전통적인 유목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지 않고, 유치원과 일반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다. 북방 토착민의 전통적 경제활동을 보존하고 아동에게 민족문화, 모국어,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며,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하공화국이 유목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2) 민족 고유의 전통적 문화, 경제, 언어의 회복, 보존 및 재생산

사하공화국은 전술한 것처럼 북방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목학교의 부활을 시도했고 현재 여타 지역들에 비해 유목학교에 관한 법률제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

터 2008년까지 <사하공화국 정부결의안 No. 228: 유목교육기관 시스템 개념 승인>, <농촌 교육기관의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 및 무료 유치원, 초등,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용조달 기준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었다. 사하공화국 내 아모소프대학과 북동연방대학교에서 유목교사 양성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유목학교는 명확히 어떤 형태의 학교를 의미하는가. 유목학교라는 명칭이 일차적으로 주는 이미지는 토착민 공동체를 따라 이동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목학교의 종류와 형태는 의외로 다양하다. 이를 사하공화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유목민학교 - 순록목동, 사냥꾼, 어부,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공동체와 함께 이동한다.

▶ 초등유목학교-유치원 - 기본 교육기관의 분교적 개념으로 유치원 및 초등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유목민 공동체와 함께 이동하며 아동에게 민족문화와 언어, 전통적 관습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 공동체학교 -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소규모 학교로, 기본 일반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한다. 해당 지역 일반학교의 분교로 운영

▶ 튜터학교 - 기본 일반교육 프로그램 가동. 교사가 직접 순록목축, 낚시, 사냥 등 가족공동체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 타이가 학교 - 일정 교육을 받은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고정유목학교 - 일반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고 툰드라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만 민족문화와 민족어 등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일요일 학교 - 말 그대로 일요일에만 개방하여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없는 소규모 정착지에서 민족문화교육을 실시한다.

▶ 통신망 유목학교 -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유목학교

▶ 여름 유목학교 - 여름방학 동안 전통적 자연환경 관리와 전통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민족문화, 민족어, 전통경제활동을 학습하는 교육기관의 분교로 특히 민족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하공화국 이외 다른 지역에 개설된 유목학교에는 다인종교육기관 ‘파유타’, 유목민족캠프, 유목유치원(알파벳만 집중적으로 학습), 계절유목초등학교, 중등일반교육 유목학교 등 여러 가지 다

양한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학습시간이나 툰드라, 타이가와 같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자연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도 교육형태가 구분되기도 하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유목학교’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유목민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학교’와 특정 지역에 설치된 작은 건물이나 캠프를 활용하는 ‘고정학교’, 계절에 따른 학교, 유치원, 기본학교의 분교 등 다양한 형태와 목표로 나뉘기 때문에 ‘유목학교’로 통칭되는 교육기관의 개념은 결국 이동성보다는 ‘유목생활을 하는 토착민의 교육을 목표로 기본 기숙학교의 추가적 활동을 위한 학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목학교는 학교의 이동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지며 주로 유치원과 초등교육을 위한 추가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 교육은 여전히 규모가 큰 정착지에 위치한 기숙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사하공화국 법에 따르면 “원주민이 밀집된 거주지에 있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의 분원이다.”, “유목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유목생활에 적합하고, 가족교육의 전통을 보존하며, 토착민 고유의 도덕, 관습, 전통의 연속을 보장하고,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노동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유목학교의 정의를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사하공화국에 설립된 유목학교 13개 중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목학교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하공화국에 유목학교가 세워진 것은 1990년대 초이지만 북방지역에서 유목학교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유네스코가 ‘토착민 학생들의 문해력 보장’ 프로젝트를 위해 사하공화국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국제 프로그램과 사하공화국의 문화부흥에 대한 시대적 염원이 맞물리면서 전통과 가족공동체와의 단절로 인한 토착민 고유의 전통 및 정체성 소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유목학교의 부활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유목학교의 부활로 토착민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사하공화국 측 유목학교의 교육목표를

- 1) 교육의 접근성을 보다 수월하게 보장
- 2) 가족 및 민족공동체, 고유의 문화적 환경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
- 3) 경제활동의 전통적 특성 특히 순록목축업, 민족문화 및 언어의 보존, 민족 관습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정체성의 보존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목학교의 전반적인 역사와 특징, 왜 북방 토착민들이 유목학교라는 형태에 집중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유목학교는 현실적으로 기숙학교의 대안이 맞는가. 교육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유목학교들을 유지하는데 일반 기숙학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이동해야 하고 전통적 삶의 방식에 따라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고, 주로 보편교육의 추가적 학습이나 기숙학교 입학 전의 예비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민족교육에 치중하는 교육방식 등은 러시아 시민으로서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미래에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III. 결론

러시아 북방지역은 수세기 동안 유목 및 반유목생활을 하던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18세기 이후 러시아인의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슬라브문화와 러시아어, 기독교의 강제적 수용을 겪는 과정에서 선교학교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토착민 아동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토착민의 민족적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교사가 유목민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전통적 삶과 현대식 교육의 장 그리고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지 않는 이동식 교육을 시도했으며 이를 유목학교라고 불렀다. 러시아 최초의 유목학교 실험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나 선교학교처럼 유목학교 역시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소연방의 성립 이후 북방 지역 토착민 교육은 점진적으로 기숙학교로 대체되었는데, 초기 선교학교와 마찬가지로 토착민 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강제 징발과 분리가 진행되었다. 1950년대 이후 기숙학교제도가 안정화 되고 유목민이 이동생활을 멈추고 정착민화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숙학교는 북방지역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과 민족공동체, 전통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단절된 채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 토착민 아동은 초기에는 새로운 생활과 언어,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아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고 기숙학교 의무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반대로 기존의 툰드라 지대에서의 순록목축과 이동을 근간으로 하며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전통적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소련 시절 집단농장 정책과 유목민의 정착유도, 목초지의 국가 점유 등의 문제가 순록목축을 근간으로 하는 토착민의 전통 보존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토착민 아동이 기숙학교 교육을 통해 점차 ‘러시아화’ 되고 전통적 삶의 방식과 민족어, 민족공동체 소속이라는 정체성의 상실이었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 북방 토착민들은 새로운 문화부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오랜 세월 혹독한 자연과 기후조건 속에서 순록목축을 기반으로 유목 및 반유목생활을 하며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 언어를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을 회복하고 ‘뿌리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것이다. 문화부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무엇보다 어린 세대의 정체성회복이 중요하며, 이것은 보편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북방지역의 기본교육제도인 기숙학교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교육제도로써 유목학교의 부활을 불러왔다.

북방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목학교를 부활시키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시도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사하공화국이 있다. 사하공화국은 유목학교를 “사하공화국 법에 따르

면 “원주민이 밀집된 거주지에 있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의 분원이다.”, “유목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유목생활에 적합하고, 가족교육의 전통을 보존하며, 토착민 고유의 도덕, 관습, 전통의 연속을 보장하고,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노동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법적 규정과 30년 간 개설된 유목민학교, 초등유목학교-유치원, 공동체학교, 튜터학교, 타이가학교, 고정유목학교, 일요일학교, 통신망유목학교, 여름유목학교라는 다양한 형태와 교육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하공화국이 추구하는 유목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 교육의 접근성을 보다 수월하게 보장
- 2) 가족 및 민족공동체, 고유의 문화적 환경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
- 3) 경제활동의 전통적 특성 특히 순록목축업, 민족문화 및 언어의 보존, 민족 관습에 따른 자녀 양육으로 정체성의 보존 및 발전

전술한 유목학교의 세분화된 종류와 교육의 내용 등으로 보았을 때 유목학교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유목학교’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유목민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학교’와 특정 지역에 설치된 작은 건물이나 캠프를 활용하는 ‘고정학교’, 계절에 따른 학교, 유치원, 기본학교의 분교 등 다양한 형태와 목표로 나뉘기 때문에 ‘유목학교’로 통칭되는 교육기관의 개념은 결국 이동성보다는 ‘유목생활을 하는 토착민의 교육을 목표로 기본 기숙학교의 추가적 활동을 위한 학교’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0년의 실험 속에서 유목학교의 맹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숙학교보다 높은 유지비용,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이동해야 하고 전통적 삶의 방식에 따라 학습기간에 차이가 나고, 주로 보편교육의 추가적 학습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미래에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기숙학교 입학 전의 예비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민족교육에 치중하는 교육방식 등은 러시아 시민으로서 동등한에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현대 토착민 부모들도 이미 어린 시절 기숙학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기숙학교 제도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해도 정규교육이 주는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추세이다. 부활한 다양한 유목학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비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숙학교와 유목학교는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며, 서로 상호 보완하는 매커니즘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References]

Жиркова З.С., Кочевая школа - инновационная модель в развитии системы циркумполяр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на примере сете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порной Тополинской СОШ и кочевой школы “Айлик” Монография, *Наукоемкие технологии*, 202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от 15 декабря 2014 года 1401-3 N 359-V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28 апреля 2022 года)

Зимин А.В.,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Ямале в XVII - начале XX в.”, *Материалы V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09.

Лонгортова Е.В., “Особенности социализации детей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условиях школы-интерната”, *Управл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м No.7-1(94)*, 2019.

Малышева Е.В.:Набок И.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о. Среда. Развитие., No.-1*, 2015.
Николаева А.Д., “Образование в условиях кочевья (научный обзор)”, *Серия “Педагогика. Псих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2021.

Ситникова Н.В.,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кочев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2021.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ОПЫТ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В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ВЫЗОВЫ, ДОСТИЖЕНИЯ, ПЕРСПЕКТИВЫ

Кашина Е.В.

д.э.н., профессор, Сибирский фед. университет

Бурменко Р.Р.

к.э.н., доцент Сибирский фед. университет

Бурменко Т.А.

с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ибирский фед. университет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имеет свои вызовы и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одолеть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стойчивости и благополучия нашей планеты. Перечислим основные вызовы, являющиеся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и:

1.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увелич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таких как углекислый газ, приводит к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что может вызывать экстремальны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моря и ухудшение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что требует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и переходу к чистым источникам энергии.

2. Растущая популяция: увеличение населения мира ставит под угрозу доступ к ресурсам, таким как пища, вода и энергия.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устойчивые методы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треблени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ей всех людей.

3. Истощен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переработка и потреблен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таких как леса, вода и минералы, происходит на ускоренном уровне, что приводит к их истощению. Необходимо управлять ресурсами эффективно и находи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источники материалов.

4. Ухудшение экосистем: неподходящее земледелие, загрязнение и потеря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приводят к ухудшению экосистем, что может иметь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и человека. Необходимо защищать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экосистемы.

навливать экосистем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их устойчив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5. Бедность и неравенство: неравномер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ресурсов и доступа к образован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и другим базовым услугам могу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достижению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борьбы с бедностью и неравенством.

6. Отсутств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координаци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требу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координац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Отсутствие согласованных действ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может затруднить достиж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собенно важным достиж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тановится тогда,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развитии территорий.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 две страны, где активно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над устойчивым развитием, их опыт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ным дл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мира.

Россия, с ее огромной площадью и разнообразием климатических зон, столкнулась с большими вызовами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Описание опыта страны в этой сфере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Во-первых, Россия предпринимает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ы,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баланса. Примером этого может служить соз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родных парков и заповедников,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ю уникальных экосистем, таких как тундра или бореальные леса. Россия также активно вовлечена в развити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Применение солнечной и ветровой энергии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развитию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по масштабам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стране, также проводи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опыта Юж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высокая степень инновационности в сфере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тране удалось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сво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ископаемых видов топлива и повысить долю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в обще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балансе. К ним добавились 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сокращению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ии и снижению в

ыбросов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 город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обращение с отходами. Города страны стремятся к созданию «зеленых» зон и пространств с максимальной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ю. Также в стране активно применяются технологии утилизации и переработки отход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Рио-де-Жаней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Данная декларац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ава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нормативных принципов по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большинства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 России и развивает положения, содержащиеся в декларации конференции ООН по проблема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ринятой в Стокгольме 16 июня 1972 года (Стокголь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Декларация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ООН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27 принципов экологически корректного поведения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1992 году в Рио-де-Жанейро состоя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ООН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дан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и приняты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е документы по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Декларация Рио-де-Жанейро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Рамочная конвенц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Главной целью Конвенции является стабилизация уровень концентраци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атмосфере на таком уровне, который бы предотвратил опасное влияние антропогенного фактора на климат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В докумен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жидаемый уровень должен быть достигнут в достаточно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в связи с адаптационным периодом экосистем к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естественным путем,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м возникновения угроз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устойчив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1].

Продолжением Конвенции и развитием положений и принципов, принятых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1992 году, является Киотский протокол, который обязует индустриально развитые страны ограничивать и сокращать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сован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Действие

данного протокол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олько на развитые страны. На них возлаг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принципу «общей, но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Это вызвано признанием гла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этой группы государств за нынешни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атмосфере, которое ведет к глобальному потеплению [2].

В документах Конференции ООН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сформулирован принцип неразрывности задач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исунок 1)

<Рисунок 1> Взаимосвязь обеспечения сохранности экологии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2015 году были приняты Ц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ОН (Повестка дня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ликвидацию нищеты, сохранение ресурсов планеты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лагополучия для всех. Повестка дн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это далеко идущий план масштаб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включающий 17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и неразделимых целей и задач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а повестка дня универсальна и касается всех стран.

Повестка дня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Рисунок 2)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и будущего всех людей во всем мире.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егодня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мею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инятые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й и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золюции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мира, но 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На самом деле, устойчивое и всеохватное развитие – это не тольк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цель, но и наилучший из имеющихся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блем.

«Рисунок 2» Цели ООН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1. Ликвидация нищеты	2. Ликвидация голода	3. Хорошее здоров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4.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5. Гендерное равенство
6. Чистая вода и санитария	7. Недорогостоящая и чистая энергия	8. Достойная работ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9.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инновац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10. Уменьшение неравенства
11. Устойчивые города 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12. Ответствен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и производство	13. Борьба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14. Сохранение морских экосистем	15. Сохранение экосистем суши
16. Мир, правосудие и эффективные институты	17. Партнерство в интересах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Повестка дня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уть постро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гибкого и надежного мира и реализуетс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и сообществ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оссии. В отчете о результатах экспертно-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Анализ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недрению Повест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за период 2019 года, истекший период 2020 года» [3]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ложения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оссии во многом пересекаются с Целям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ЦУР) и в целом позволяют обеспечить реализацию задач,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сем целям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ак в публично-правовых, так и в частноправовых отношениях. В связи с чем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Рисунок 3) 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его обеспечению.

Высшей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о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и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актам обладает Конституция РФ, в которой заложены основные нормы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креплено, что каждый имеет право на благоприятную окружающую

ую среду, 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ее состоянии 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ущерба, причиненного его здоровью или имуществу экологическим правонарушением.

<Рисунок 3>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Гла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а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читаю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граммы, декларации, повестка дня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федеральные законы, доктрины, кодексы и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подзаконные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Ф, распоря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едомственные акты,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субъектов РФ, например, организаций и другие акты. В таблице 1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действу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Таблица 1]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4]

Уровень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еждународны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Декларация Конференци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по проблемам окружающей человека среды (1972 г.) (Стокголь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 Декларация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ООН (1992 г.); – Рамочная конвенц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 Киотский протокол к Рамочной конвенци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 Цели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ОН.
Федеральны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390 «О безопасност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2.07.2021 №400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кологическая доктрина РФ от 31.08.2002 г. №1225-р); –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 Стратег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 Водный кодекс РФ от 03.06.2006 г. № 74-ФЗ;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Ф от 25.10.2001 г. № 136; –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до 2050 года – ФЗ от 30.03.1999 №52-ФЗ «О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м благополучии населения»; – ФЗ от 04.05.1999 № 96-ФЗ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 ФЗ от 24.06.1998 № 89-ФЗ «Об отход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требления»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5 апреля 1998 г. № 65-ФЗ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Региональны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Закон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от 20.09.2013 № 5-1597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е» –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до 2030 год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края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Южной Кореи в област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остоит из Рамочного закона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который служит основным законом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также более чем 70 конкрет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кон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различных источников загрязнения. В рамк

ах этой обширной структуры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отдельных законов тесно связаны с принципам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и заслуживают подроб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СУР)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документом, в котором излагаются цели и стратег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В таблице 2 представлена хронология принятия основны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Ю. Корее

[Таблица 2]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Ю. Корее [5]

Год принятия	Документ
2008	Зеленый курс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200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зеленому росту».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зеленого роста» на период до 2050 г.
2009-2013	Первы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зеленого роста. Цели: 1. Смягчение последствий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2.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двигател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3.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и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вторитета
2011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зеленого роста»
2012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зеленых технологий»
2014-2019	Второй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зеленого роста Цели: 1. Эффектив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2. Создание устойчив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3. Создание экологии для зеленой твор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4. Реализация устойчивого зеленого общества 5. Укреп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го зеле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0	«Генерального плана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 превращение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 в экономику с нулевым карбоновым следом

Воздух, вода и почва. Качество воздуха и воды регулируется Законом об охране чистого воздуха, Рамочным законом об управлении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Законом об охране водной среды.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очв регулирует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загрязнением почвы, запрещает удаление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и устанавлив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загрязнение почвы.

Обращение с отходами и ресурсами. Сбор,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хранение, переработка и утилизация твердых и опасных отходов регулируются Законом о контроле за отходами, Законом о содействии сбережению и переработке ресурсов и Рамочным законом об обороте ресурсов.

Химические вещества. Закон о регистрации, оценке и т. д. хим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K-REACH) регулирует выход на рынок хим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Закон о контроле за химическими веществами регулиру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хим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после их поступления на внутренние рынки. Кроме того, Закон о контроле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ю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хим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и биоцидов (K-BPR) устанавливает стандар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аркировки для некотор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хим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и требует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импортеров биоцидных продуктов получ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нергии. Корея создала Схему торговли выбросами (K-ETS)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и торговле разрешениями на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реализуя рыночный подход, который устанавливает цены на 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позволяет торговать разрешениями на выбросы. Закон о рационализ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нергии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вышение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смягчение воздействия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ии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До середины и конца 2000-х годов Южная Корея считалась страной, предлагающей передовую модель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2000 году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созда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совет по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В 2006 году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2008 году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ерв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клад об оценке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Департамент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ООН (UN-DESA), чья оценка усил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полити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бы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й,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Центр ООН по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в Корее [6].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актик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можно оценить, изучив их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социальный прогресс и защит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актик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страны, при этом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играют «зеленая» экономика и творческие индустрии. Страна также добилась прогресса в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реализовав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и продвижени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и. В России практи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экономики, повыш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защит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3]. Несмотря на достигнутый прогресс, все еще существуют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включая снижени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скопаемого топлива и улучшение мер по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целом, хотя и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ложи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ия в их подходах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может д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ильных и слабых сторонах практик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аждой страны и помочь определить области для улучшения.

Случай Кореи уникален и актуален для ответа на вопросы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ичинам. Во-первых, Корея – развитая страна, в которой относительно мало пробле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азвивающимися странами.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о-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в реализации ЦУР,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эмпирической применимости в других случаях. Во-вторых, в стране получила развитие сама концепция «устойчивости». Произошел ряд политических ве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изменений,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изучения участия различны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орон и изменений в управлении в реализации ЦУР. В-третьих, в случае с K-SDGs суще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локализации норм и контекстуализации целей. Фундамент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и видение K-SDG соответствуют руководящим принципам ЦУР ООН, а конкретные цели и показатели отражают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кст [7].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Политика ООО «Славнефть-Красноярскнефтегаз» в области промышл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храны труда. Введена в действие приказом от 4.06.2018 г. №471. – URL: https://www.slavneft.ru/_upload/editor_img/HSE_policy_04_06_2018_01.pdf
2. Бовт Г. Санкции без границ. URL: <https://www.bfm.ru/news/49574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1.01.2024).
3. Кошкаева Т.С. Влия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на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фирм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022. № 85-6. С. 126-129.
4. Орлов А.И. Эконом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тоды при управлении промышленно й 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 Политематический сетевой электронный научный журнал Куб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гра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лектронны й научный журнал). 2015. № 110 (06). URL: <http://ej.kubagro.ru/2015/06/pdf/15.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1.2024).
5. Taejong Kim, Soogil Young. Secrets of an Economic Miracle: Less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South Korea.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2019. ISBN (electronic): 979-11-5545-189-2. URL: https://archives.kdischool.ac.kr/bitstream/11125/34117/1/2019_KDIS_Secrets%20of%20a n%20Economic%20Miracle_final.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1.2024).
6. Hyunjung Lim, Jonghwan Eun. Exploring Percep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 Approach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s Belief System.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Vol. 4, Issue 4, 2018, 54. ISSN 2199-8531, <https://doi.org/10.3390/joitmc4040054>. URL: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199853122003742>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1.2024).
7. Park, K. R., & Park, Y. S. 2024. Addressing institutional challeng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lementation: Less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32(1), 1354-1369. <https://doi.org/10.1002/sd.2725>. URL: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002/sd.2725>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1.2024).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